

이 대통령, 인적 쇄신 폭 어떻게 될까

# 번진 '촛불' 끄려면 '교체 폭풍' 불가피

### 한 "총리·비서실장 사의 표명해야"

### 靑-내각 수장 동반 사퇴는 안할 듯

여권이 쇄고기 파동에 따른 공지에서 탈출하기 위해 '친박 복당-인적쇄신-국정쇄신' 등 3대 민심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인적쇄신의 폭이 얼마나 되느냐와 쇄고기 재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강경 목소리에 청와대가 차츰 수긍하는 형세로 진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총리, 비서실장 다 바뀌야"=한나라당 내에서 2일 민심수습을 위한 국정쇄신과 관련,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남경필 의원은 "이명박 정부를 지탱하는 비서실, 총리 및 내각, 당이라는 3개 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3개 축이 다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총리나 대통령 비

서실장까지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인사를 주도한 대통령 보좌관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친이 주류 측 한 재선 의원도 "우선 내각 수장으로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때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면서 "내각이 총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그 안에서 문책성 인사를 해야 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대표도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민심을 일신하는 차원에서 폭넓은 개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개각 폭과 관련 "폭넓게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비서진 전면 교체되나=하지만 여당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교체할 경우, 내각 전체를 교체하는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수석이 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2일 의원총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정운영 난맥상에 대한 불만과 쇄신안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론은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대신 청와대 비서관들의 전면적인 교체로 정국의 물고기를 돌릴 것으로 보는 관측이 더 유력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수석이 일

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자는 의견을 강력 개진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이견 조율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수석 간 의견 절충이 이뤄지는 대로 금명간 일괄 사의의 표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게 되면 이

대통령은 이들 전원을 대상으로 선별 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포함해 최소 4~5명의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각 폭이 장관 4~5명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비서진 대폭 교체로 확대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박지경 기자 tuim@kwangju.co.kr

## “장관 고시 철회하고 재협상 하라”

### 野, 쇄고기 고강도 공세 계속

정부가 쇄고기 파문 확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인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재협상 없는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현 사태를 '총체적 비상사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야 3당 대표와의 조속한 정치회담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게재 철회 ▲어청수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 등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또 3당이 쇄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측전연병에방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의 명동 규탄대회에 이어 3일에는 인천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광주와 부산, 대전 등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순학규 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적당히 장관, 수석 몇 명 목 날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다른 것 제치고 장관 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는 정권의 실패를 즐기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진정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

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만나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적당히 국민을 속이고 업신여겨며 정국을 적당히 넘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천 대표도 "현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딱 한 가지, 쇄고기 재협상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장관 고시를 철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영 대변인은 여권의 친박(親朴) 복당 추진에 대해 "쇠고기 재협상을 하려는 것과 무관 상관이며 친박 복당이 무슨 국정쇄신이나"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또 "전경이 집회에 참석한 여대생들 군함발로 짓밟는 등 촛불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경찰이 과잉진압에 나섰다" 비판하면서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장관고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고시가 강행되면 용인과 부산 등지의 검역참고에서 쇄고기 출하를 막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 촛불 문화제 한달 ... 격화 원인·전망

미국산 쇄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2일로 한 달째를 맞이했지만 시민들과 정부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졸속협상으로 국민건강권을 희생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서울 청계광장에 공론의 장을 열었지만 행사는 1개월이 지난 현재 '반정부 투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문화제-거리행진-청와대 진입 시도=5월 2일 처음으로 시작된 촛불 문화제는 중·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돼 미국산 쇄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발병을 막자는 취지의 모임을 형성했다. 광우병 국민대회의가 시민단체의 후원금으로 구입한 양초를 나눠주고 철거민들로부터 연단을 빌려 마련한 자리에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자유발언을 쏟아내는 자리였다.

하지만 열흘 전인 5월 24일 밤 시민 3천500여명(주최측 추산 2만명)이 "청와대로 가자"며 종로와 세종로 일대 거리를 점거하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문화제의 성격은 거리시위로 변했다. '성난 민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정부와 치안당국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면서 '반 정부' 정서가 강하게 표출됐으며 급기야 5월 29일 쇄고기 수입 고시 발표를 기

## 민심 외면·밀어붙이기가 주원인

### 6·10 항쟁일·夏鬪 맞물려 국민 저항 절정 달할 듯

점으로 시위는 점점 과격해졌다.

29일 저녁 촛불집회의 규모는 그간 최대인 1만명(주최측 5만명)을 넘어섰으며 대학생들이 집중 가세한 31일과 1일에는 각각 4만과 2만명(경찰추산, 주최측 14만명)이 집결해 일부는 밤을 새워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악화 원인=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메시지를 경청하지 않는 데 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경찰과 일부 보수단체 등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놓은 '문화제 배후설'도 자발적으로 나온 시위대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경찰의 시위자에 대한 무분별한 연행, 특공대 투입, 전의경의 과잉 대응 논란 등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시민단체들은 분석했다.

◇대규모 행사 예정=시민들의 반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시민들이 대규모로 운집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10일에는 1987년 6월 민주화투쟁 2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리고 13일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효순·미선양의 6주기 기념식이 예정돼 있다. 15일은 6·15선언 8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움직임도 매년 이때쯤 시작되는 하투와 맞물려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

7월에는 미국산 쇄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당사자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답방이 예정돼 있어 거리시위가 그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 野 의원들 촛불 문화제 가세 ... 시민들 냉담

"뒤늦게 와서 뭐하려는 것이냐" "못 미답가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매한가지다."

통합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와 거리시위에 본격적으로 가세, 눈길을 끌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촛불문화제 현장에 있던 젊은 여성의 자유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잘 드러냈다.

스스로 96학번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국회의원들이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들이밀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의원들의 참여를 기회주의적 행태로 몰아부쳤다.

문화제를 진행한 사회자는 국회의원들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한 명에게 발언 기회를 주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청중에게 물었으나 호응은 크지 않았다. 결국 의원들은 발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거리시위 참가자들의 반응도 싸늘하긴 마찬가지였다.

박모(32)씨는 "민주당은 그동안 침묵하며 국민을 지켜 주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국민의 뒤나 따라가려 하고 있다"며 "재보궐선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꼬집었다.

친구와 함께 시위에 나온 이모(40)씨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은 봤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못 봤다.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못 얻어서 말쑥감치 있다가 그냥 돌아간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이 힘들어 차려 놓은 밥상에 민주당이 이제 와서 밥숟가락이냐 그랬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p><b>무인 - 상해</b></p> <p>상해(상하이) 4일 479,000원</p> <p>상해(상하이) 5일 889,000원</p>	<p><b>무인 - 대만</b></p> <p>대만(타이베이) 4일 689,000원</p> <p>대만(타이베이) 5일 629,000원</p>	<p><b>무인 - 홍콩</b></p> <p>홍콩(홍콩) 4일 399,000원</p> <p>홍콩(홍콩) 5일 479,000원</p>	<p><b>무인 - 서울</b></p> <p>서울(서울) 4일 499,000원</p> <p>서울(서울) 5일 649,000원</p>
<p><b>무인 - 상해</b></p> <p>상해(상하이) 4일 479,000원</p> <p>상해(상하이) 5일 889,000원</p>	<p><b>무인 - 대만</b></p> <p>대만(타이베이) 4일 689,000원</p> <p>대만(타이베이) 5일 629,000원</p>	<p><b>무인 - 홍콩</b></p> <p>홍콩(홍콩) 4일 399,000원</p> <p>홍콩(홍콩) 5일 479,000원</p>	<p><b>무인 - 서울</b></p> <p>서울(서울) 4일 499,000원</p> <p>서울(서울) 5일 649,000원</p>
<p><b>무인 - 상해</b></p> <p>상해(상하이) 4일 479,000원</p> <p>상해(상하이) 5일 889,000원</p>	<p><b>무인 - 대만</b></p> <p>대만(타이베이) 4일 689,000원</p> <p>대만(타이베이) 5일 629,000원</p>	<p><b>무인 - 홍콩</b></p> <p>홍콩(홍콩) 4일 399,000원</p> <p>홍콩(홍콩) 5일 479,000원</p>	<p><b>무인 - 서울</b></p> <p>서울(서울) 4일 499,000원</p> <p>서울(서울) 5일 649,000원</p>
<p><b>무인 - 상해</b></p> <p>상해(상하이) 4일 479,000원</p> <p>상해(상하이) 5일 889,000원</p>	<p><b>무인 - 대만</b></p> <p>대만(타이베이) 4일 689,000원</p> <p>대만(타이베이) 5일 629,000원</p>	<p><b>무인 - 홍콩</b></p> <p>홍콩(홍콩) 4일 399,000원</p> <p>홍콩(홍콩) 5일 479,000원</p>	<p><b>무인 - 서울</b></p> <p>서울(서울) 4일 499,000원</p> <p>서울(서울) 5일 649,000원</p>